

기독교와 평등: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김승욱(중앙대 교수/ 기독교학문학회 회장)

1.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깊어지고, 높은 실업률과 성장잠재력의 하락에 복핵 사태까지 가세하여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임기 말의 정부와 여당은 사분오열되어 있고, 야당도 대선 준비에만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386으로 대변되는 진보세력은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기독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 진영은 현실적 대안 마련에도 부족했고 신자수마저 줄어들었다. 이제라도 사회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깊이 고찰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의 가치관으로 평등을 제시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양극화 해소에 힘을 기울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이전을 추진했다가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포기했다. 다시 수도권분할을 추진하였으나, 지역갈등이 증폭되었고 전국이 개발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노동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은 3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권을 걸고 해결하려고 하던 주택가격 안정도 실패했다. 집값은 더 올라 소박한 시민의 심정만 허탈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렸다. 수도권이전은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아파트 가격 안정은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말 실패의 이유가 국민들 때문인가?

이 글에서 성경은 평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평등지향 정책 중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기독교학문연구회 주최로 7개 기독교 학술단체가 공동개최한 제23회 기독교학문학회에서는 바로 이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 학회에서는 총신과 고신의 총장들이 기조강연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문제에 성경적 평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발표했다. 그리고 경제, 교육, 철학, 사회, 문화 등 5개 분과에서 이를 주제로 총 25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이 학회를 준비하고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평등정책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2. 성경적 세계관과 평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등을 좋아한다. 잘살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 최근(2006년 11월)에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초/중/고등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큰 것보다 모두가 못살아도 평등하게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43.7%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34%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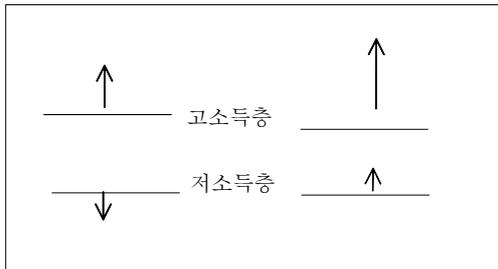
평등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에서 살펴보자. 성경은 성삼위의 존재론적 평등과 기능적 차별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각자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는 차별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기능적 차별성을 존재론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에 대해 열등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물질적 소유를 중시 여겨 - 특히 유물론자들은 - 경제적 불평등을 참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평등하면 사회의 모순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는 평등 지상주의에 쉽게 빠진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영혼 구원을 넘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적 평등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1 양극화의 두 종류



배고픈 문제와 배아픈 문제

배고픈 문제(절대적 빈곤)와 배아픈 문제(상대적 빈곤) 중 어느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 빈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의 절대적인 빈곤은 최악이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 언급된 빈곤문제는 대부분 이러한 절대적 빈곤에 대한 대책이다. 따라서 의, 식, 주, 의료, 교육의 5가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수준까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 문제 즉 배아픈 문제는 경제가 성장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제성장을 하면 할수록 격차는 더 나는 경향이 있고, 소득이 높아져도 눈높이는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물론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상대적 빈곤감의 문제는 비교에서 나오며, 마음과 신앙의 문제인 것이다.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20세기의 역사적 실험을 통해 인류가 깨달았다. 공산주의와 복지국가 이념을 가지고 분배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갔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라는 것을 강조한다(눅 3:14; 딤후 6:8; 히 13:5).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분량의 은사와 재물을 주셨다(벧전 4:10; 롬 12:6; 고전 7:7; 고전 12:9, 28-30). 각자 받은 분량을 족한 줄로 알고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엡 4: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가 빈곤층 해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양극화의 해결에 초점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이다. 첫째는 절대적 빈곤 대신 상대적 빈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잘못이고, 둘째는 정부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양극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경우가 있다. 첫째는 좌측과 같이 가난한 사람은 못살게 되고 부자는 잘 살게 되는 식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우측과 같이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양극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느냐가 아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상황이 개선되는지 악화되는지 또는 너무 천천히 개선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점은 정부는 저소득층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참여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해결은 교회 등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정부에 의한 방법이고, 둘째는 개인이 직접 구제하는 방법이고(요일 3:17; 신 15:7-11), 셋째는 교회 등 자

발적 단체에 의한 방법이다. 이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첫 번째의 정부가 하는 방법은 도움을 받는 쪽에서 그것을 권리로 인식하여 감사를 모르고, 도덕적 헤이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와 복지국가 이념이 주로 이러한 방법에 기초를 둔 것이었는데 지난 세기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방법은 경제의 인센티브와 활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효율을 잠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개인이 직접 구제하는 것은 성경의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는 측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예속되기 쉽다. 따라서 개인적인 자선은 구제의 형태를 지니는 것보다 고용의 형태나 소비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구제의 방법은 마지막 방법으로 교회나 민간 기관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누가 도움을 주는지 모르게 할 수 있고, 도움 받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구제소가 아니라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병원, 교육기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

3. 부동산 정책과 평등

표 1 주택가격, 물가, 소득 추이(1990-2004)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12
서울아파트	100	95.5	91.4	88.8	89.9	89.9	93.7	98.6	84.2	94.7	98.7	117.7	154.0	169.6	167.9
연립	100	99.1	92.3	90.7	90.9	90.7	91.2	92.4	78.7	78.3	80.1	86.9	97.9	99.2	95.1
단독	100	99.0	93.2	89.9	89.6	89.0	88.5	88.1	77.9	78.4	79.7	84.8	97.6	102.6	102.6
강남아파트	100	94.9	89.8	87.4	89.3	89.7	94.0	99.1	85.7	98.8	103.8	126.6	171.2	195.7	193.1
연립	100	100.1	96.7	94.8	95.3	95.2	96.3	99.0	80.7	82.2	85.8	96.2	112.0	114.3	109.7
단독	100	100.5	97.0	92.1	91.6	90.8	90.5	89.6	74.9	76.3	78.7	87.6	101.6	109.3	109.6
물가지수	100	109.4	116.3	121.8	129.4	135.1	141.9	148.1	159.3	160.6	164.2	170.9	175.5	181.8	189.5
도시근로자소득	100	122.8	143.8	156.7	180.4	202.6	228.2	242.5	226.1	235.9	253.0	278.3	296.0	311.7	340.9

* 자료 : 국민은행, 한국은행 물가지수, 통계청 도시, 근로자소득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도 양극화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때면 흔히 등장하는 것이 강남의 타워 펠리스 사진과 함께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이었고, 버블 세븐 운운하며 부자 동네의 아파트 가격에 관심을 가졌다.

먼저 사실 확인을 해보자. 지난 15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집값에 비해 부자들의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사실이다. <표 1>에는 지난 1990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울과 강남의 아파트, 연립, 단독 주택의 가격, 물가 및 소득을 1990년을 100으로 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이 중에서 강남지역의 아파트와 연립 및 단독 주택의 지수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지난 15년 동안, 서울이나 강남지역 모두 평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와 그림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파트의 경우 작은 평수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투기꾼들 때문이 아니라 정부정책 때문이었다. 과거에 주택 정책의 초점은 서민주거안정이었다. 그래서 서민주택을 많이 지었고, 부자들의 집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불이익으로 공급을 억제했다. 게다가 소득 수준의 상승과 함께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따라서 서민주택에 비해서 고급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다. 서민주거안정은 올바른 목표였고 그것이 달성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

제였는가? 바로 배 아픈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 집 값은 별로 안 올랐는데 부자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이 배 아프다는 것이었고, 이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과연 강남 집값 상승이 정권을 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는가? <표1>과 <그림 3>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지난 15년 사이에 3.4배 상승한데 비해서 물가는 1.9배 정도 올랐다. 그런데 부동산 양극화를 문제시 삼던 참여정부 초기에 가장 많이 오른 강남 아파트의 경우에도 1.93배로 물가 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 <그림 4>를 보면 주택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버블이 꺼졌던 일본, 통일로 인한 후유증을 겪은 독일, 중국으로 반환되어 많은 부자들이 떠난 홍콩만이 유일하게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가격이 올랐다. 그 이유는 자본과잉 시대에 접어들어 저금리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정부가 정권을 걸고 부동산과 전쟁을 벌인 나라는 없다.¹⁾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오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아픈 문제를 자극하여 인기에 영합했다. 이와 같이 주택문제 해결에 실패한 첫째 이유는 목표설정의 잘못 때문이다.

두 번째 잘못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투기꾼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공권력의 힘으로 가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만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었고, 새로운 공급을 할 때마다 투기꾼들이 몰려든다는 것 때문이었다.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었으므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모두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소득상승을 무시한 소치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성장을 한 나라이고 그 결과로 백만장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린 차의 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제일 많이 팔리던 차가 과거에는 프라이드나 엑셀 등 소형차였는데, 소나타 등 중형차로 변했다가 최근에는 대형차인 그랜저XG였다. 이는 소비 패턴이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택수요도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일인당 주거 면적이 빠르게 늘어나, 25년 사이에 약 2.5배 넓어질 정도로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반면에 아파트 공급가격을 규제했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였다. 따라서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도 고급주택

그림 2. 강남지역 주택가격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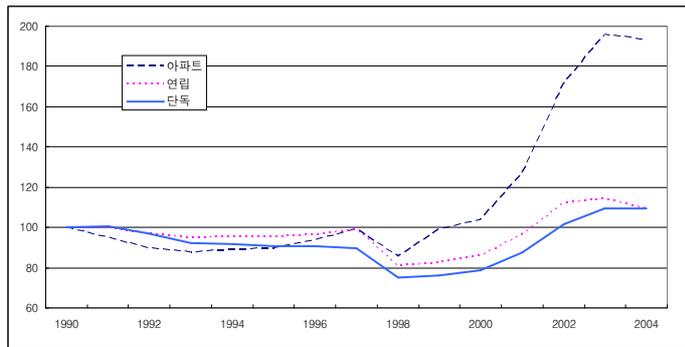


그림 3 소득, 물가,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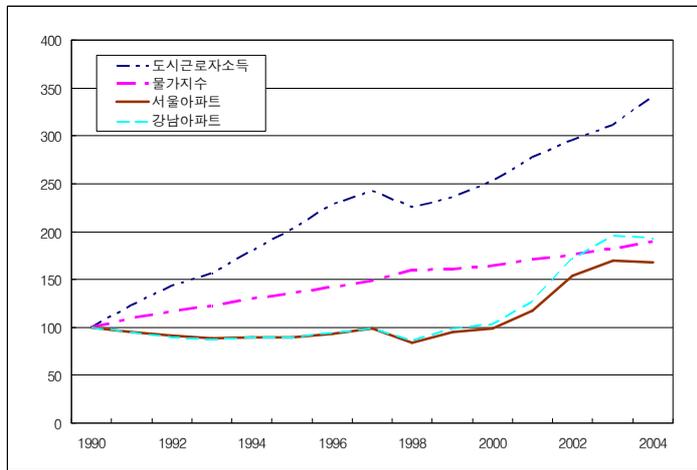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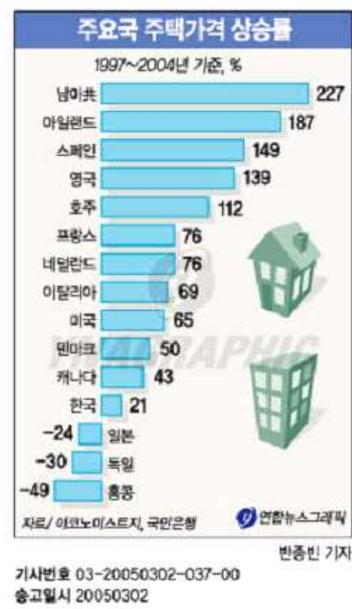


그림 4



1) 김정호, <땅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자유기업원, 2006.

에 대해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다.

또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투기꾼이 많아서가 아니라, 분양가 규제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준다는데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또 부자들이 여러 채를 소유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선진국에도 자기 집 이외에 수억원씩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택은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런데 자신의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수익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주거목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무리한 요구이다. 주거수요와 보유수요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유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의 투자수익이 은행이자나 다른 투자 수익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값이 오르고 그래서 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시작은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보유수요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은 항상 오른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림 6>은 지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도시 지역 명목 및 실질 주택매매가격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80년대 후반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1990년 이후 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과 전국적인 200만호 건설에 의해서 집값은 떨어졌다. 명목주택가격은 약간 떨어지는 정도였지만, 이를 물가로 나눈 실질주택가격은 상당히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명목 주택가격마저도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르기 시작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도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했고,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도 주택공급을 확대시켰다. 그런데 <그림 8>에서 보듯이 참여정부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감소시켰다. 미국은 계속 주택공급을 늘린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주택공급을 줄였다. 그 결과가 작년과 올해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일인당 주거 면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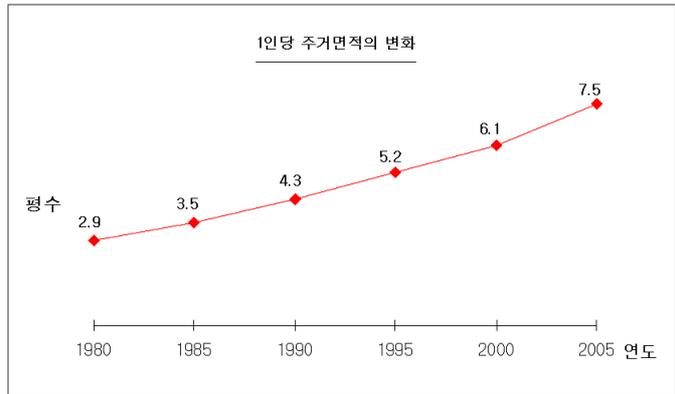


그림 6 전 도시 명목 및 실질 주택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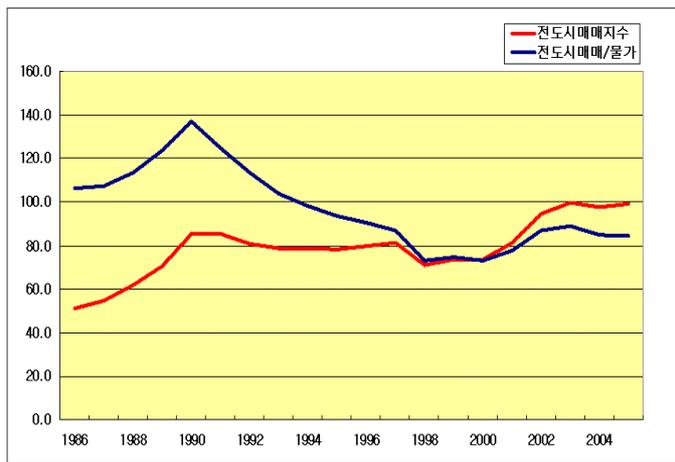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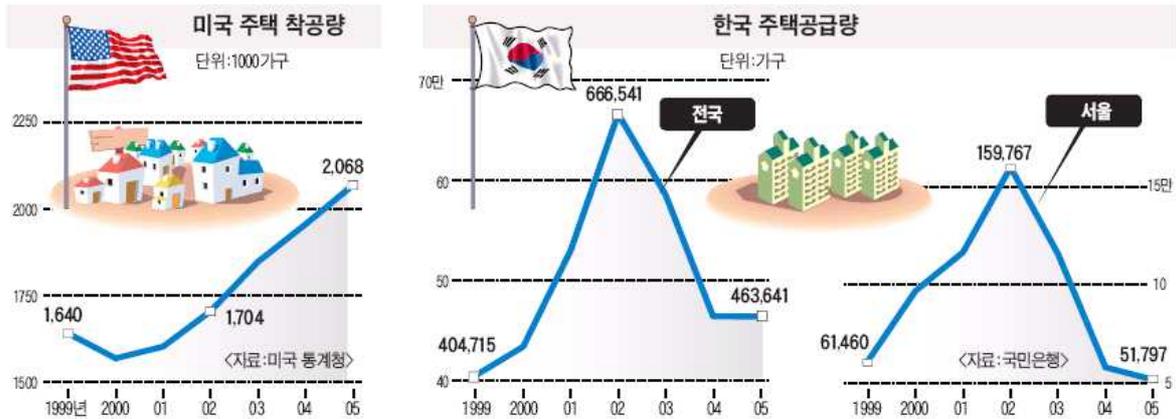


그림 7 한국의 주택 건설 실적



그림8 미국과 한국의 주택공급량 추이



조선일보 2006년 11월 3일 B3면

최근에는 땅은 정부가 소유하여 임대하고 집은 국민에게 분양한다는 소위 ‘대지임대부 집분양’ 을 통해서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 정책의 허점은 정부가 세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가격을 낮추어서 공급하면 처음 입주한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결국 그 집의 가격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갈 것이라는 것이다. 과거 시영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러한 방식으로 지어졌는데,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토지를 주고 이주시켰다. 재건축 시점에 왔을 때 건물소유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생존권을 요구할 경우 그것을 들어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입주자들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 되고 만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지 못해 도시의 흉물로 남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참여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그 이유는 첫째, 정책의 초점을 저소득층의 문제 해결에 두지 않고, 온 국민의 배 아픈 것을 달래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곳에 두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가 기독교계에 주는 시사점은 아무리 성경적이고 좋은 목표라 할지라도, 현실과 전문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성경적 기본 원리를 잘 융합시켜서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캘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타락 이후에도 ‘지상의 일들에 관한 지식’ 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남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비기독교인들이 발명한 자동차도 감사함으로 탄다. 경제학의 경우 시장에서 수요의 힘과 공급의 힘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이 가격을 신호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경제활동을 벌인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이론도 세상적인 것이라고 배격할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경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하나의 절차 또는 과정이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해야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배분된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그 원가에 일정액의 적정 이윤을 붙여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산정된다면 주택공급자들이 원가절감의 노력을 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기존주택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누가 게으르고 비효율적인가는 불완전한

정부가 감독을 통해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리도록 보장하는 운동경기의 심판 역할을 하고,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회균등 보장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해외 유학 가는 것 못지않게 영어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모든 의무교육 과정에도 영어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 것이다. 이런 일에 정부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하에서 경쟁을 용인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문제는 교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캘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빈부격차를 허용하는 이유를 부자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